

매년 반복되는 교권 침해… 교총 “정부·국회, 대책 마련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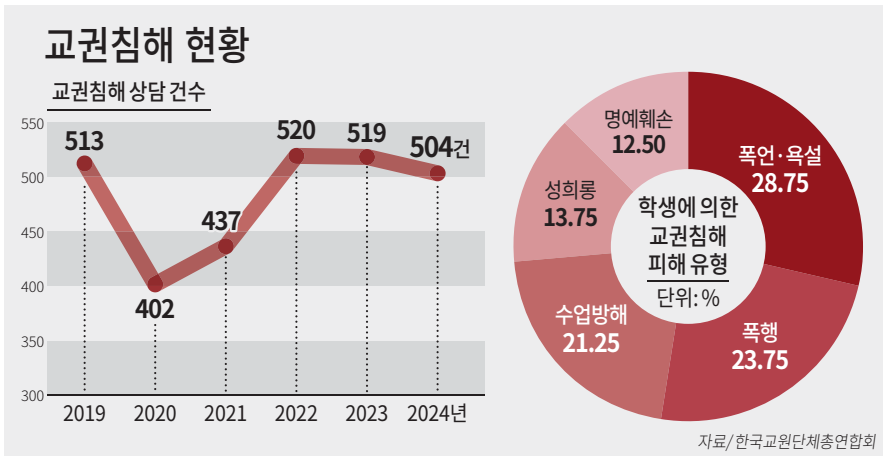
3년 연속 500건 이상 기록
‘학부모에 의한 피해’ 최다
“교원지위법 개정 등 필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한 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가 3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건에 달했다.

교총이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8일 발표한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 519건, 2022년 520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500건을 웃돌았다.

◆‘교권침해’ 학부모 의한 피해가 1위

교권 침해 주체는 여전히 학부모가 1위였다. 전체 교권 침해 접수 건수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9건(31.6%) ▲학생에 의한 피해 80건(15.9%)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2년 520건 중 241건(46.3%), 2023년에는 519건 중 251건(48.4%)으로 매년 절반에 육박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었다.

총 208건의 교권 침해 사례를 원인 별로 살펴보면, ‘학생 지도’ 관련이 143건으로 68.8%를 차지했다. 이중 아동학

대 신고 관련은 80건으로, 전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208건의 38.5%에 달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항을 악용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다”라며 “일단 신고되면 교원은 교육청 조사, 지자체 조사, 경찰 및 검찰 수사까지 이중삼중 받느라 일상이 무너지고, 무죄·무혐의가 돼도 그 동안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교권5법 개정·시행에도 효과없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도 80건 접수돼 전년(75건)보다 증가했다.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 중 ‘폭행’은 2023년 8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두 배 이상 경증 늘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폭언·욕설(23건, 28.8%)이었으며, 폭행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생에 의한 피해 총 80건 중 77.5%에 해당하는 62건은 여교사를 대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의 경우 19건 중 단 1건을 제외한 18건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희롱 사례도 2023년에 9건에서 지난해엔 11건으로 늘었고, 이중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이 이뤄진 경우는 8건을 차지했다.

교총은 “2023년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권 침해와 교원들의 고통은 체감할 만큼 줄지 않았다”라며 “교사가 교실에서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없다면 학생의 학습권도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법·제도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넣어 달라며 각 당에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이 발표한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는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찰 불송치(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적용(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한정(학폭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비율 상향 ▲단위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학생·교원 마음 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등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교육부, ‘거점형 돌봄기관’ 확대 운영

전국 52곳 지정… 휴일 등 돌봄 강화
“맞춤형 정책으로 학부모 부담 완화”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52개 거점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침·저녁,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돌봄 연계와 기관별 장점을 활용해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중에서 거점기관을 지정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휴일 등에 인근 타 기관(2개 이상) 돌봄 필요 유아를 포함해 추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인근에 지정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



교육부 세종 청사

/메트로신문

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해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모를 거쳐 총 52개 기관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했으며,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춰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근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및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교육·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거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해 상담이나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학부모 수요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초등학생 안심벨’ 배송·배부

1차 9만3797개… 12일부터 2차 접수

서울시가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누르면 경고음이 울려 위험 상황을 주변에 알리는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체 606개 초등학교 중 500곳에서 신청을 완료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신청한 5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순차적으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총 9만3797개를 배송·배부한다.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은 초등학생이 위급 상황 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경고음으로 주변에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제품은 배터리(동전 건전지) 교체형으로 제작돼, 위급 상황에만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배부되는 수량은 각 학교가 1·2학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신청한 수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서울시

량에, 고장, 분실, 전학생 발생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포함해 산정됐다.

아울러, 시는 이번 1차 신청에 참여하지 못한 초등학교를 위해 12일부터 16일까지 2차 추가 신청을 받는다. 추가 신청은 각 학교별 단체 신청만 가능하며, 접수된 학교에는 별도로 배송 및 배부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인천대, 이인재 총장 임명

인천대학교는 제4대 총장으로 이인재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임명됐다고 8일 밝혔다. 인천대는 7일 오후 교육부로부터 10일자로 이인재 교수를 총장에 임명한다는 인사발령 공문을 전달받았다.

인천대는 지난해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올 초 정책평가단 온라인 투표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1위 득표자인 이인재 교수를 최종 선정하고 교육부에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이인재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2029년 5월 9일까지 4년간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다문화 학생 통번역 지원

학교폭력 등 진술권·방어권 보장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통번역 지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다문화 학생의 진술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통번역 지원 사업을 5월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9일 동대문·중랑구 등 자치구 가족센터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시 18개 언어를 지원하는 ‘생활 통번역 인력풀’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학생의 진술권과 방어권을 방해하는 언어 장벽 문제 해결과 함께 국내 거주 이주배경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경 서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더 이상 언어 장벽이 학생의 권리를 가로막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며 “이번 운영 결과를 타 교육지원청과 공유하며 제도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포천시, 급수구역 복선화 본격 추진

수자원공사 광역 상수도 사업 연계

포천시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추진 중인 광역 상수도 복선화 사업과 연계해 포천시의 핵심 급수구역에 대한 자체 복선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적인 상수도 악재를 완화하고, 공급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광역 송수관로의 복선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오는 2029년 포천계통 낙양가압장~군내배수지 26.51km에 대한 복선화를 마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같은 국가사업의 흐름에

맞춰 지난해 덕소정수장 계통 광역배수지 군내~일동배수지 구간 14km의 복선화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의 복선화 노선과 시 차원의 자체 구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다중 공급망 확보, 배수지 체류시간 확보, 유속 안정화를 통해 지역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기술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과학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포천(경기)=김용택 기자 mk4303@